**사고와표현 토론 찬반 논제와 반론 1조**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 미래 과학이 답하는 8가지 윤리적 질문>

찬성 1 : 노나영 / 반대 1 : 김이재

찬성 2 : 윤지연 / 반대 2 : 조건희

찬성 3 : 김민석 / 반대 3 : 김가현

**주제 :** 4장 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의 감시탑

**텍스트 논제 :** 저자는 국가의 공익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타당하다.

**심화 논제 :** 어린이 집 CCTV는 의무이다.

* **찬성 측**

|  |  |
| --- | --- |
| 텍스트 논제 | [논점]   1.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침해되면 안된다. 2. 국가안보의 명분 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 감시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국민은 자기검열을 통해 의사표현을 제한받고, 사생활을 침해받게 된다. 3. 공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4. 사생활 침해 대신 범죄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논거]   1. 헌법 제 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3. 사생활 보호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보장 받아야한다. 4.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빨간 가로등을 파란 가로등으로 바꿨을 때 범죄율이 낮아진 결과가 있다. |
| 심화 논제 | [논점]   1.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부모의 알 권리이다. 2. 아동보호와 아동인권이 교사 인권 침해보다 우선이다. 3.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부모의 알 권리이다. 4. 사후 검거에 용이하다.   [논거]   1. 교사들이 CCTV를 인식하면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2.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을 때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2001년 3%에서 2017년 14%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율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상담수가 늘어났다. 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
| 텍스트 논제 반론 | [논점]   1.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줘야만 한다. 2.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오히려 모든 국민들을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며 기업과 결탁해 국민 전체를 감시하는 국가감시(state surveillance)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   1.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감시 프로그램을 사들인 사례를 든다. 2.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때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해 자세히 요구한다. |
| 심화 논제 반론 | [논점]   1.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다. 2. 당연히 아동학대는 cctv 를 설치 안했다고 해서 발생하는게 아니다.   [대책]   1.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한다 했는데, 이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장 교수님들만 봐도 맡게 된 강의가 우리랑 똑같이 연강이 되버리면 점심시간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다. 또 어린이집을 가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곳이나 밥을 먹을 때는 같이 쉬고 계신다. 그러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범죄동기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범죄 이론 중 박수 이론에서 “범죄를 줄이려면 범죄동기와 범죄기회를 없애야한다.” 에 속한다. 2.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배포한 2015년 12월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7회였던 아동학대가 66회로 급격히 증가한 2015년도에 총 272건의 기사 중 CCTV 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118건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은 2~7건 밖에 없다. 이를 보아 보조 인력 충원이나 정서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할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을 갑작스러운 아동학대로부터 막아야만 한다. |

* **반대 측**

|  |  |
| --- | --- |
| 텍스트 논제 | [논점]   1. 개인은 국가의 집합체 중 개별적인 존재이다. 2.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감시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위험에 방지할 수 있다.   [논거]   1.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에 의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해야한다. 2. 사회에 큰 범죄가 생겼을 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건분석을 자세히 할 수 있다. |
| 심화 논제 | [논점]   1.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2.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곧 cctv 미설치 때문은 아니다.   [논거]   1. 어린이집 교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며, 휴게실 등 개인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전에는 교사가 cctv 설치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됨으로써 선택권이 없어졌다. 교사들은 cctv 때문에 항상 통제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내용,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2. 2017년 8월 28일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cctv 미설치라고 답한 (복수 응답 가능) 교사는 2.6% 뿐이었다.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충원’ 이 91.1% 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를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 이 88.8 % ,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 이 79.8% 였다. 또, 경기도 교육 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참고하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한 인력 채용,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활성화 등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 텍스트 논제 반론 | [논점]   1. 제도적으로 CCTV 영상을 관리하고 열람하는 절차를 강화한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책]   1. 만일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더 이상 그것은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한다. |
| 심화 논제 반론 | [논점과 대책]   1.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하게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2. 교사가 CCTV로 인해 신경을 쓰다 보면 수업의 내용과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수업을 듣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침해되는 것이다.   CCTV에는 교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동의 모습도 찍히게 되는데 이것 역시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 의무화를 한다고 해도 CCTV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CCTV설치는 오히려 사각지대 내 에서의 아동폭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CCTV 설치 이전에 교사 자질 평가를 강화한다면 교사가 아동에게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 자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도 폭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피해사실에 있어 아동 역시 대처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후 검거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